

건설 공사비 정상화 통한 일자리 회복 시급

건설協 도회 정책토론회 참석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건설업계가 공사비 정상화의 당위성을 제기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불공정한 공공공사비 책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여년간 공공공사비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국 1,500개 건설사가 적자에 빠져 일자리 감소 현상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4만5,000여개 일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인철 회장은 “정부는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해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규기자

“공공 공사비 산정 정상화 필요”

건설업계, 낙찰 체계 등 개선 촉구

건설업체들이 공공부문 공사비 과소책정으로 인한 부실공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공사비 책정 불공정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건설관리학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원가산정과정에서 실적공사비단가(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품셈 현실화로 예정가격이 10.4~16% 수준으로 축소되자 공공공사를 100% 수주한 업체들 중 33.3%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 물상향△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산정 등 덤핑입찰 유도 구조개선△공사비 이의신청 제도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공공부문의 공사비 산정을 정상화해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관호

不用예산 '재활용'... SOC 투자공백 못막는다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가 올해 쓰지 못한 불용예산 '재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효성 없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사업 확대 등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는 건설경기 위축을 막을 수 없다는 다선급금 확대나 공기단축 압박 등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7일 관계기관 및 업체에 따르면 정부 및

정부, 내년 예산 축소 대안 제시
업계 "조삼모사식 처방일 뿐"
신규사업 확대 없이 景氣 위축

여당은 SOC 예산의 대규모 감축에 대한 야권의 비난에 대해 올해 다 쓰지 못하는 불용 예산을 앞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다.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약 3조원의

SOC 불용 예산을 적극 집행한다면 총 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에 따른 건설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해 지역경제 등이 위축될 경우 공기업 선투자나 기금을 통해 재정보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불용 예산이 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과 더불어 활용 방침을 세우고 서부터는 SOC 등 건설투자 관련 보강대책은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전년도 이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도 새해 대규모 예산삭감의 충격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집행 절차나 처제의 개선 방침을 정책적 해법인 양 제시한 데다, 신규 사업의 추가 반영 등 기존 예산안을 구성하는 사업내역은 전혀 조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봉승권기자 skbg@

국회의원 15인 "공사비 정상화 위한 법적장치 만들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성황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국회에서 가장 큰 회의실이지만 보조의자를 포함해 600석이 넘는 객석이 꽉 들어찼다. 자리를 찾지 못한 200여명은 서서 듣거나 문 밖에서 영상을 통해 토론회를 지켜봐야 했다.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설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가득 울려 퍼졌다.

김두관·배재현·안규백(더불어민주당), 박명재·윤재옥·이우현(자유한국당) 등 여야 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현장은 내내 뜨거웠다.

토론회장에는 공동 주최자인 6명의 의원 외에도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홍문중·김성태·이현재·추경호·최교일(자유한국당), 강길부·홍철호(바른정당) 의원 등 무려 15명의 의원이 행사장을 찾았다.

내년도 예산 심의 중에 토론회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공사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공사비 산정기준의 불합리성과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제도 폐해로 인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화, 일자리 감소, 각종 안전사고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명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안으로 피멍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 자리에 온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법적·제도적 개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공사비 정상화라는 좋은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공사비 정상화는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기회

에 건설현장의 불공정·불합리한 제도를 꼭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잘못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예산을 이유로 제대로 된 공사비 지급을 기피하는 갑질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공사비 정상화는 바퀴의 양축이자, 동전의 양면"이라며 "건설인을 대신해 전문가들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문중 의원 역시 "건설산업 없이는 대한민국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건설산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길부 의원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법령으로 건설업을 할 수 없다"며 적정 공사비 확보와 설계능력 확충을 주문했다.

토론회에서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태민 현대중공업건설 대표는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위주의 계약심사를 통해 2중, 3중으로 설계금액을 줄이고 있다"면서 "공사비 부담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기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에 공시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를 도입했지만 조정신청 회수와 시기, 보상사유와 대상을 축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여전히 소송 등을 통한 해결은 불가피해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참가자들이 SOC 투자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도자 의원, 윤영일 의원, 추승용 의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정인화 의원, 허승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손성원 CNC중합건설 대표이사 안윤수기자 ays77@

"건설투자, 2018년부터 마이너스 전망... 내수 위축 우려"

SOC투자 정상화 정책토론회
내년부터 증가율 둔화 불가피
"SOC 투자야말로 건강한 투자"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건설투자가 내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고 내후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나 삭감 편성하는 등 건설투자를 계속 줄인 탓이다.

허문중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추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했다. 허 연구원은 "건설수주는 7분기의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과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6년부터 본격화된 건설수주 둔화가 2018년부터 건설투자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각각 3.5%와 3.0%에 머무를 전망이다. 지난해 건설기성 및 투자가 10~15%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을 감안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허 연구원은 "2019년 2분기부터 건설투자가 소폭 감소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연구원은 "건설투자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60~70%를 웃돌았던 만큼 SOC 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내수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건설이 복되고 일자리입니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합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SOC 투자 정상화를

촉구했다. 추승용 의원 외에도 국민의당에서 정동영·윤영일·장정숙·최경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안호영·정인화 의원이 함께 했다. 추승용 의원은 "SOC 투자는 1차적으로 도로·교량·공원 등 국민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2차적 파급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일이 생겨나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SOC 투자야말로 일과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건강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시설 확충은 장기간에 이르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놓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며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올바른 SOC 투자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SOC 예산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정부 “3兆 이월액으로 시장충격 완화” 업계 “선급금 확대·工期 단축 부담만”

정부·여당은 3조원에 달하는 예산 이월액을 활용하면 건설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접근방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새삼스레 이월액 활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SOC를 포함, 예산과 관련한 불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남은 예산을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SOC 삭감기조를 어떻게 매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월금을 적극 활용하고 불용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가 확대하는 등 정책적 전환 없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나무가 고사 위기에 처했는데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먹다 남은 열매를 주겠다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는 물론 올 상반기까지도 국내 전

성장률·일자리 견인해온

건설 경기 급속 위축 막을

정책 지원 인식전환 필요

체 경제성장률과 일자리를 견인한 건설산업과 건설투자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데 정책적 지원이나 인식의 전환 없이, 재정집행 체계나 절차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별 숙원·현안사업과 국민안전을 위한 노후인프라 보수·보강, 도시재생 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라며 “불용예산을 줄인다고거나 이미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이월액을 활용해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는 불용예산 재활용은 되레 건설현장 및 업체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규사업 확대 없이 인허가나 민원, 자연재해 등으로 이월된 불용액의 집행률을 높인다면, 사실상 보상비 조기지급이나 기존 완공사업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업계에 선급금 부담이나 공기단축 압박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용예산 활용은 인허가 등 사업절차 개선이나 규제 완화, 각종 민원 및 분쟁 해소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인데, 정책적인 투자방향의 해법인 양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신규사업 추가 등 조정 없이 이월액 집행만 늘리는 것은 기존 사업의 보상금을 조기 지급하거나 공사현장의 선급금 및 기성액을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주난은 수주난대로 내버려두고, 공기단축 압박과 각종 민원해결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복승권기자 skbond@

社 說

SOC 불용예산 재활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이 SOC 예산 삭감의 대안으로 올해 불용예산을 재활용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정작 건설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건설업계의 물량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SOC 예산 축소에 따른 건설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불용예산 재활용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이월액이 예상되는 약 3조원의 SOC 불용예산을 적극 집행하면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에 따른 건설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불용예산도 대부분 기존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물량난 해소에 도움이 되긴 힘들어 보인다.

지금 건설업계에 필요한 건 신규 사업이다. 공공건설에서 건설사업은 수주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지금처럼 기존 사업위주의 예산배정은 건설산업에 도움이 안 된다. 정부의 기조는 SOC의 경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로망이나 철도 보급률, 도심

권의 출퇴근 시간 등은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물 공급도 OECD 최하위 수준이다. SOC에 대한 지속적인 신설, 확충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복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SOC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SOC야말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생활복지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복지정책만 강조하면서 SOC는 등한시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곤란하다. 이런 임시방편보다는 건설산업에 대한 기초변화가 필요하다. 건설예산 축소 기조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불용예산은 올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매년 발생한다. 내년에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그 다음해에 투입하면 건설경기 침체가 해소되었는가. 건설산업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안이 아닌 것이다. 건설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이런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의존할 것인가.